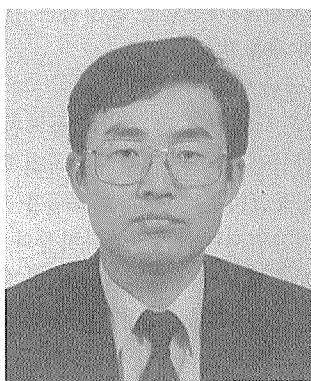


정유업계의 경영현황과 정책과제



朴永德
(油公 업무부장)

I. 머리말

세계적으로는 이데올로기시대의 종말과 냉전체제의 종식이라는 역사적인 변혁위에서 유럽 경제지역 (EEA)/북미자유무역협정 (NAFTA) 등 경제블록화, 지역경제주의의 양상이 심화되는 가운데 우루과이라운드협상이 급속도로 진전되고 있고 브라질의 리우데자네이루에서는 UN환경개발회의가 개최되는 등 선진국의 개방압력과 환경규제 움직임이 가속화되고 있다.

국내적으로는 남북교류가 급속히 확대되고 CIS나 中國 등 사회주의 국가와의 교류가 본격화되는 등 정치적으로는 활기를 띠고 있으나 '89년을 고비로 활기를 잃기 시작한 국내경제는 국제경쟁력 약화에 따른 무역수지적자 확대, 경제성장을 둔화 및 물가 상승등으로 국내산업이 전반적으로 큰 어려움을 겪고 있다.

이제 환경보호와 개방화라는 거대한 세계의 흐름 속에서 우리 정유업계도 이에 대한 대비를 늦출 수 없는 시점에 와있다. 하지만 정유업계는 그동안 겪어졌던 오해와 편견의 무게 이상으로 경제적인 어려움에 직면해 있다. 低油價政策의 후유증으로 국내 석유수요는 세계적인 증가율을 시현한 반면, 걸프사태기간중 발생한 손실부담 등으로 심각한 경영난을 겪고 있는 정유업계는 정부의 과도한 이익규제로 인해 손익상황은 오히려 더 악화되고 있으며 국제 원유가격과 환율이 상승해도 이를 국내 유가에 적기에 반영치 못해 재무구조는 갈수록 취약해지고 있다.

국내 정유업계는 輕質化/低硫黃化 등 석유소비패턴의 변화에 대처하여 국내 석유의 안정공급기반을 구축하고 환경규제강화 및 개방화에 대비한 경쟁력 강화를 위해 정제시설 고도화, 물류시설의 확충, 해외유전개발 확대, R&D 투자 강화 등 量的팽창보다는 質의성장을 추구해야 할 시기에 와 있다. 이에 소

요되는 막대한 투자비의 부담은 가뜩이나 어려운 국면에 있는 정유업계를 한계상황으로 몰아가고 있다. 최근 어려움에 처한 정유업계의 당면 현안중에서도 특히 심각한 경영수지악화 및 物流시설부족현상의 현황과 문제점을 살펴보고 이에 대한 정책 대응방향을 제시해 보고자 한다.

II. 정유산업의 경영환경 및 문제점

1. 경영수지의 악화

(1) 저조한 收益性

국내 정유산업의 현실을 보면 外華內貧의 대표적인 것일 수 있다. 매출액만을 놓고 보면 정유산업은 향간의 속설대로 「황금알을 낳는 거위」라고 말해도 좋겠지만, 그 수익규모를 놓고 보면 「코끼리의 비스켓」도 되지 않는다는 것을 알 수 있을 것이다.

대표적인 수익성 지표인 자기자본이익율을 보면 <표1 참조>정유업계는 '80년대 중반에는 정부의 허용이익률(세후 10%)이나 다른 장치산업의 수준에는 못미쳐도 그런대로 제조업 평균이익률과 비슷한 수준을 유지해 왔음을 알 수 있다. 그러나 '89년부터 정유산업의 이익률은 타업종과 비교가 안될 정도로 급전직하하여 '91년에는 적자를 나타내는 등 정상적인 경제원리로는 설명키 어려운 정도로 경영수지가 악화되고 있는 실정이다.

이렇듯 저조한 정유산업의 이익구조는 또다른 수익성지표인 매출액이익률에서 더욱 뚜렷이 볼 수 있다. 최근 3개년간 정유업계의 결산손익은 정부의 허

용이익수준에 크게 못미치는 수준으로 <표2 참조> '91년에는 정부허용이익보다 무려 1,441억원이나 미달했다. 이에 따라, 정유업계의 매출액이익률은 제조업평균매출액이익률수준(1.4~1.6%)은 커녕 '91년에는 오히려 적자를 보이고 있어 <표3 참조>, 매년 20~30%씩 증가하여 '91년에는 10조원에 다다른 매출액과 심한 대조현상을 보이고 있다.

이와 같은 현상은 '92년에도 이어져 '92년 상반기 정유5사 경영실적을 보면 매출액은 전년 상반기 대비 14.4% 증가한 5조5천억원을 시현했으나 세전순이익은 320억원의 적자를 보이고 있어 赤字慢性化의 경향마저 보이고 있다. 이에 따라 정유업계는 현재와 같은 유가관리가 지속될 경우에는 구조적으로 손익 및 자금악화에 따른 정유업계의 부실화가 가속화되고 향후 투자능력의 상실로 수급불안과 더불어 유가인상요인으로 작용할 것으로 판단하고 이에 대한 조속한 대책수립을 요청하는 건의문('92. 7)을 정부에 제출한 바 있다.

(2) 자금난 악화

정유산업은 국가산업 및 국민에 동력원을 공급하는 국가 기간산업으로서, 급증하는 국내 석유수요에 대하여 안정공급이라는 사회적 책임을 갖고 있다. 이를 위해 정유업계는 정제·물류시설의 확충 및 현대화에 대한 투자사업과 수요경질화 및 환경보전정책에 따라 석유류 제품의 품질개선을 위한 중질유분해·탈황 등 시설고도화투자사업을 추진중에 있다.

<표-1> 주요업종 자기자본이익률 추이

	정 유	화 학	자 동 차	가 전	한 전	제조업평균
1986	9.4	9.2	10.6	12.5	-	10.2
1987	9.8	9.8	12.2	10.1	9.2	9.6
1988	8.5	10.7	7.3	11.8	14.3	9.0
1989	5.6	8.5	5.0	11.3	11.0	5.5
1990	0.3	7.9	6.9	6.4	8.0	5.1
1991	△ 4.1	6.8	4.1	4.6	8.6	5.2

<표-2> 정유부문 세전결산손익의 對 정부허용이익

(단위 : 억원)

	1989	1990	1991
정유부문 세전순이익(A)	689	233	166
유가관리상 정부허용이익(B)	1,063	1,273	1,275
차 이 (A-B)	△ 374	△1,040	△1,441

〈표-3〉 매출액이익률 추이 (단위: 억원)

		1989	1990	1991
정유 5사	매출액	57,225	70,323	97,184
	당기순이익(세후)	445	21	△ 399
	매출액이익률(%)	+ 0.8	0.0	△ 0.4
제조업평균 매출액이익률(%)*		+ 1.6	+ 1.4	+ 1.6

* 자료: 기업경영분석

이들 투자사업의 추진에는 약 3조원에 이르는 막대한 투자자금이 필요하다. 그러나, 정유업계는 당기순이익 '90년 △110억원, '91년 △475억원의 적자로서 이러한 투자자금의 내부조달이 사실상 불가능한 실정이다. 국내 통화정책상의 제약 및 대기업 여신관리정책으로 인하여 외부차입조달 여건도 극히 어려운 상황에 놓여 있다. 여기에 표4에서 보는 바와 같이 '90걸프사태부터 발생한 원가차액보전 미수금액이 현재 약 2,800억원에 이르고 있어 정유사는 단기 운영자금 수지면에서도 큰 어려움을 겪고 있는 실정이다. 또한, 지난 4월부터 시행된 주유소 상표표시제에 따라 정유사간에 주유소 확보·유치 경쟁이 가열된 것도 정유업계의 자금난을 가중시키고 있는 한 요인이 되고 있다.

〈표-4〉 정유사 원가차액 미보전 현황 '92.8월말 현재)

1990. 걸프사태 손실보전 미수금	122 억원
1991. 손실보전 미수금액	2,638 억원
1992. 8월현재 미보전금액	2,760 억원

지난 6월 25일 국내 유가조정에 따라 정부는 '92년 하반기 국내도입기준 원유비(FOB)를 18\$/B로 책정하여 유가를 관리하고 있으나, 이미 '92. 7. ~ 8월 국내도입 원유가가 19\$/B를 상회하고 있어 이로 인한 추가적인 손실발생이 예상되는 등 정상적인 경영활동 수행마저 어려운 심각한 상황임에 따라 정유업계는 정부에 자금지원대책 건의('92. 8. 14)까지 한 바 있다.

최근 정부는 내년 1월 1일부터 유전스 사용기간을 단계적으로 감축하여 최종적으로 현행보다 35일가량 줄일 방침을 굳히고 있어 이에 외상판매기간 감축 등 자구노력이 없는 한 정유사의 자금난은 더욱 심각해질 것으로 예상된다.

(3) 정부의 과도한 정유사 利益規制

정유업계가 지금과 같이 손익상황과 자금상황이

극도로 악화된 이유는 여러가지로 설명할 수 있을 것이다. 지난해부터 속속가동된 신규정제시설의 감가상각비 및 차입금이자 부담 등 초기 고정비의 급증, 여타경제부문에서의 현상처럼 급격히 늘고 있는 물류비용(수송·저유비), 주유소 유치·확보경쟁 코스트증가 등도 그 이유의 하나로 꼽을 수 있겠다. 그러나, 정유업계의 손익과 자금상황이 악화된 가장 중요한 이유는 바로 정부의 과도한 정유사 이익규제에 있다 하겠다.

첫째, 정부는 정유사의 實發生 비용을 인정치 않고 유가인상요인의 최대억제라는 단기적 관리목적상 해마다 정유사의 정제비용을 과도하게 부인하여 유가에 반영하지 않고 있다.〈표5 참조〉.

〈표-5〉 정제비 내역

	1990	1991
실발생정제비 (₩/B)	2,947	3,058
정부반영정제비 (₩/B)	2,273	2,720
차 이 (₩/B)	△ 674	△ 338
(유가미반영정제비) (억원)	△ 2,004	△ 1,356

이러한 현상은 '92년에도 계속되어 정유사의 손실부담을 가중시킬 것으로 우려되고 있다.

둘째, 정부는 物價管理를 목적으로 원유가격 및 환율변동 등 실 원가상승 요인중 일부만을 유가에 반영함으로써 정유사는 원가상승요인을 가격에 전가하지 못하고 그로 인해 손익 및 자금상황이 더욱 악화되고 있는 바, '92년의 경우 석유제품가격의 원가요소인 원유가격 및 환율의 급등으로 인한 원가상승분이 적기에 석유제품 가격조정으로 반영되지 못함에 따라 이로 인한 손실이 약 3,000억원에 이를 것으로 추정된다.

2. 국내 석유수급 안정화를 위한 투자부담의 가중

(1) 국내 석유수요 급증추세 지속

'91년중 국내 석유소비자는 425백만배럴로 전년대

비 19.2%의 증가율을 기록하여 '87년 이후 4년동안 평균 19.2%라는 세계 초유의 석유소비증가율을 지속하였으며 <표6, 표7 참조>, '92년 상반기에도 전년동기대비 29.7%의 엄청난 증가세를 나타냈다.

<표-6> 국내 석유수요추이

	1988	1989	1990	1991
국내석유수요 (천B/D)	686	787	976	1,163
증가율	18.9%	14.7%	24.0%	19.2%

<표-7> 주요국가 석유수요 증가율 비교('87-'91평균)

미	국	유	러	일	본	한	국
0.2%		1.3%		4.2%		19.2%	

자료 : B. P 통계자료

이와 같은 국내 석유수요의 급증세는 저유가에 기인한 것으로 우리나라는 '86년 이후 8차에 걸친 유가 인하로 저유가기조를 유지했으나, 선진국의 경우는 석유수요억제를 위해 고유가정책을 지속시켜 왔다. 이에 따라, '92. 6월 휘발유 소비자가격의 경우, 한국은 '92. 6. 25가격인상후에도 '80년 2차 석유위기 Peak시 가격과 거의 비슷한 수준인 반면 주요 선진국은 50%이상 오히려 비싼 수준을 유지하고 있다. <표8 참조>.

국내 석유수요의 급증과 함께 석유수요구조의 경질화추세가 가속화되고 있는데 <표9 참조> 정부가 '93년부터 초저유황 연료유인 0.2% 경유와 1.0% B-C유 공급확대정책을 추진하는 등 향후에도 계속적으로 환경규제를 강화할 것으로 보여 저유황화 추세도 더욱 심화될 전망이다.

<표-9> 경질유·중질유 수요구조 추이 (단위 : %)

	1981	1985	1991	2000
경질유 수요구성비	44	53	58	80
중질유 수요구성비	56	47	42	20

이러한 석유수요의 量的膨脹과 質的高級化로 인하여 정유업계는 국내 석유수급 안정차원에서 막대한 규모의 공급시설 투자를 조속히 추진해야만 하는 부담을 안고 있다. 이제 정유업계는 겨우 상압정제 시설 증설을 완료하고 습돌릴 여유도 없이 중질유 분해·탈황시설, 중간유분탈황시설, 입·출하시설, 수송·저유시설의 확충에 매달려야 할 처지에 있다. 문제는 예상외의 높은 수요증가로 인해 최악의 손익·자금수지상황하에서도 이러한 수급안정을 위한 시설투자를 시급히 수행하지 않으면 안된다는 것이다. 이점에서 정부는 기존의 물가관리형·정유사이익규제형 低油價政策基調를 근본적으로 탈피하여 산업정책적 측면과 수급정책적 측면에 역점을 둔 수요관리형·투자촉진형 유가정책기조로 전환되어야 할 것이다.

(2) 物流施設 능력의 제약

중질유 분해시설 및 탈황시설 등 고도화시설은 석유수요구조의 경질화·저유황화에 안정적으로 대처하고 향후 대외개방에 대비한 원가절감 및 수출 조정능력 등 국제경쟁력 확보를 위하여도 필수적으로 요구되는 시설이나 물량 수급면에서는 경질·저유황원유의 증량수입이나 과부족제품의 수출입 등 임시 방편으로라도 당분간은 대처가 가능할 수 있다. 그러나, 정유공장에서 생산된 제품을 최종소비까지 적기에 안정적으로 공급하기 위하여 필수적인 수송·저유등 물류시설은 다른 대안이 없다는 점에서 그 시설확충이 시급한 당면과제로 대두되고 있다.

우리나라는 현재 전국적으로 사회간접자본의 부족현상을 겪고 있는 바 수송이 상당한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석유산업은 석유수요 급증에 따른 수송수요증대로 더욱 어려움을 겪고 있다. 교통체증이나 공장 입·출하시설 부족, 유조선의 부족 및 노후화 등으로 인한 추가적 수송비발생이 계속 증가하고 있

<표-8>

각국별 휘발유 소비자가격의 변동

	한		영		프		일	
	₩/ℓ	지 수	£/ℓ	지 수	FF/ℓ	지 수	¥/ℓ	지 수
1980년 평균	581	100	28.3	100	3.38	100	147	100
1992. 6월	497	86	47.0	166	5.20	154	128	87*
(6. 25)	610	105						

* 일본은 ¥고로 인해 ₩화기준 지수는 하락했으나 US\$ 화기준 '92.6 지수는 156으로 상승

으며, 소비자 인근 저유시설의 건설이 지역주민의 시설유치 반발등으로 인한 입지난으로 지연됨에 따른 수송·저유단가 상승으로 정유산업의 물류코스트 부담은 급격히 늘어나고 있다. <표8 참조> 이에 따라, 매출액중 수송저유비 비중도 1987년의 2.6%에서 1991년에는 4.2%로 크게 높아져 정유사 수익성 악화의 한 요인이 되고 있다.

이처럼 가중되고 있는 물류코스트 부담에 더하여 더욱 심각한 문제는 석유수요가 매년 20% 정도씩 늘어나고 있는 상황에서 정유업계의 기존 수송·저유시설로서는 물리적으로 이를 감당하기에 이미 한계에 도달하고 있다는 점이다. 다시 말해 물류시설 능력의 제약으로 인하여 이제는 공급불안정 요인마저 야기되고 있는 실정으로 저유시설이 없거나 절대 부족한 지역에서는 동절기 성수기에 수송애로와 겹쳐 석유제품의 「풍요속의 빈곤」을 겪게 될 우려가 높아지고 있다.

<표-11>에서 보듯이 국내 석유류 수요에 대비한 정유사의 최대저유물량기준지속일수는 '86년말 84일 수준에서 '91년말에는 불과 65일수준으로 격감되었다. 특히, 전국 각 지역의 수요증가에 대처해야 하는 수요처 인근 저유소 저유시설의 지속일수를 살펴보면, 저유시설 부족현상은 더욱 뚜렷해져 '86년말 10일수준에서 '91년말 5~6일 수준으로 반감되었음을 알 수 있다. 이는 신규저유소 신설 및 기존 저유소내의 저유시설 증설이 부족했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다.

III. 정책과제

1. 유기정책기조의 과감한 전환 필요

低油價基調의 지속으로 정유산업은 물론 국내 산업 전반에 심각한 문제가 노출되었다. 국내 석유과소비로 석유수요가 지속적으로 급증하여 세계초유의 증가율을 나타내는 동안 정유산업은 공급시설기반 확충등 에너지과소비로 인한 과잉의 투자재원소요로 시설고도화 사업 추진등 질적성장의 시기가 지연되었으며, 석유수입 증가에 따른 국제수지 부담이 무역역조를 가중시켰다. 또한 저유가로 인해 에너지 절약시설에 대한 투자 소홀로 국내 산업 전반에 걸쳐 에너지 효율이 극히 낮아져 향후 고유가 도래시 국내산업의 경쟁력 약화 우려마저 낳고 있는 실정이다.

에너지 해외의존도가 높은 우리나라가 에너지과소비를 하고 있다는 것은 참으로 아이러니가 아닐 수 없다. 이제는 우리나라도 에너지 低消費型 경제·사회구조로의 조속한 전환을 위해서도 수요관리형 정책기조로 전환해야 한다.

환경규제와 개방화에 대응하여 질적성장을 이루어나가야 할 시점에서 정유업계는 정부의 과도한 이익규제로 재투자를 위한 재원은 커녕 오히려 적자마저 보이고 있어 不實化의 우려마저 있는 실정이다. 우선은 석유산업의 정상적인 성장을 위해서 정유사의 실발생비용 및 수익을 유가에 적정하게 반영시키고 국제원유가 및 환율변동등 원가요인을 국내 유가에 적기 반영하여 정유사의 경영외적 손실부담요인

<표-10> 수송저유비 증가추이

	1989	1990	1991	년평균증가율
수 송 저 유 비	2,528	2,941	3,791	23.3%
내 수 판 매 (천B)	273,098	327,225	385,903	17.2%

<표-11> 국내 저유시설 규모 및 지속일수 추이

	1986말	1988말	1990말	1991말
총저유저장시설(백만배럴)	25.3	29.3	36.4	44.0
- 공 장	19.8	23.5	30.4	37.4
- 저 유 소	5.5	5.8	6.0	6.6
내 수 (MB/D)	550	685	976	1,163
총지속일수(일)*	84	78	65	65
(저유소)	(10)	(8)	(6)	(6)

* 원유저장시설 포함

** 자료: 석유연보('87, '89, '91) 및 PEDCO 수급통계 자료

을 최소화시켜야 한다.

그리고 국내 정유산업이 지금의 어려움을 딛고 성장·발전하기 위하여서는 지금까지의 물가관리형·정유사 이익규제형 유가관리기조를 탈피하여 장기적이고 산업정책적인 유가관리로의 과감한 전환이 필요하다.

다시 말해서 국내 정유업계가 좀더 내실을 갖춘 경쟁력있는 산업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장기적 수급안정과 그에 따른 유가안정을 도모하는 방향으로 유가정책이 시행되어야 할 것이다. 그간 정부가 규제해온 정유업계의 허용이익규모가 막대한 규모의 재투자재원 확보에는 턱없이 미흡하였고, 그 허용이익조차도 제대로 향유할 수 없었다는 점을 감안할 때, 앞으로는 최소한 허용이익수준이나마 정상적으로 누릴 수 있도록 과도한 이익규제는 지양되어야 한다.

그리고 지금부터라도 정부는 국내수급안정과 국제경쟁력 강화를 위해 시급하나 막대한 자금이 소요되는 시설고도화사업등에 대해 유가정책상의 投資誘因을 제공하는 등으로 조기건설을 유도하고 이에 따르는 투자자금 소요를 정유업계가 합리적으로 조달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해 주어야 한다.

2. 物流施設 확충을 위한 제도적 정비와 지원

정유업계는 국내 석유류 수급안정을 위해서 그동안 추진해온 정제시설 신·증설 및 시설고도화 등의 생산부문 투자 증대와 함께 이제는 수송·저유시설 및 공장 입·출하시설등 물류시설의 확충에 주력하

여 석유수급안정을 위한 완결구조를 갖추도록 전력을 기울여야 한다.

그러나 현재 정유업계가 추진중인 대부분의 저유시설 신·증설사업은 여러가지 장애요인에 의해 제대로 진척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민원발생 등으로 부지확보에 난항을 겪고 있으며 비교적 저유시설 건설에 적합지인 정부조성 공단부지도 현행 법률(산업입지개발에 관한 법률, 공업배치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상 공단조성 목적에 부합되는 제조업만 입주할 수 있고 저유시설이 입주할 수 있는 근거가 없어 신규 저유시설의 부지확보가 어려운 실정이다. 또한, 부지가 확보되더라도 저유시설 건설에는 도시계획법, 소방법 등에 따른 복잡한 법적절차와 많은 제약이 따라 시행이 지연되는등 제대로 추진되지 못하고 있다.

이제는 저유시설 입주지역의 민원해소를 위해 당해 입주지역의 경제·사회 발전을 위한 혜택부여 등 NIMBY현상을 극복할 수 있는 적극적인 대응방안을 강구하여야 한다. 정부는 특별법제정 또는 기존법령을 보완하여 신규 저유시설 부지확보 및 저유시설건설의 원활한 추진을 위한 법적인 근거를 마련하고 복잡한 법적절차의 간소화 및 불필요한 제약조건의 해소에 힘써야 한다. 특히, 정제능력 현실화조치로 법정저장시설 건설에만 5,500억원이 소요되는 등 저유시설 신·증설사업에 소요되는 막대한 투자비의 원활한 조달을 위해 자금 및 세제지원방안 마련도 절실한 시점이다. ♣

■ 신 간 ■

석유제품의 규격과 품질

대한석유협회